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안)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안)

I. 문제제기

-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거리(distance)', '지역(region)', '국경(boundary)'과 같은 지리적 개념이 소멸되면서 기업들간의 업무제휴, 공동영업전략, 지분교환, M&A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¹⁾를 추진
- 기업의 생존수단으로 인식되는 전략적 제휴는 지역간 협력·제휴전략을 통해 중북투자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지역화합을 통한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win-win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영전략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관할구역 위주의 행정관행에 젖어 협력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등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때문에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²⁾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7대 전략중의 하나로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제시하고 '지역간 협력·제휴'를 강조하고 있음
 - 하천유역 환경관리, 관광문화사업, 광역시설사업 등은 행정구역을 뛰어넘은 인근지역과의 공동개발·관리체제 강화
 -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과 투자를 공동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지역협력계획제도 도입

1) , (, , , 2000)

2) , “ , , 15 2 , 42 , , 2003.6.

- ‘신국토구상’에서도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해 공동 R&D, 인프라,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편성시 우선적 반영(제39조 2항)
-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계획 및 정책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제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휴파트너 선정은 ① 문화적 일치성 ② 전략적 보완성 ③ 협력의지 등을 들 수 있음.
- 충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역사·문화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보유 자원도 상호보완적이어서, 협력의지만 있다면 이상적인 협력·제휴파트너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신행정수도의 연기·공주 입지, 금강의 공동이용 및 관리, 서해연안의 공동이용 및 관리, 광역권 개발 등 광역적 협력 및 정책적 공조사안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도 협력·제휴에 대한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음 .
- 따라서, 이 연구는 충남·전북간 협력·제휴실태를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양 지역의 협력·제휴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한 다음, 협력·제휴가능 분야를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충남·전북의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지역간 협력·제휴의 유형 및 가능분야

1. 지역간 협력·제휴의 개념

- 지역간 협력·제휴란 일정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광역적으로 공유하고, 관련되는 지역 모두가 주체로서 참여하여 상호협력하고, 사업을 공동발의하여 투자를 상호 분담하는 등의 업무제휴를 맺고 실천

하는 일체의 교류를 말함.³⁾

- 따라서 협력·제휴란 어느 일방의 편파적이고 독점적인 이익관계가 아닌 협력 당사자간의 대응한 상호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전제에서 출발.⁴⁾

2. 지역간 협력·제휴의 유형

- 협력사업 목적, 협력사업 성격,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 협력사업 방식 및 강도, 목적, 협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형과 법규에 의한 유형으로 구분

1) 협력·제휴사업의 목적

-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이나 사업이 협력·제휴의 대상이지만, 보다 절실한 영역존재
 - 협력·제휴하지 않으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
 - 협력·제휴했을 때 상호간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 협력·제휴하지 않으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외부성이 발생하는 광역시설의 이용 및 공급문제와 관련 (예) 둘 이상의 행정구역과 연계된 하천·해양 등의 수질오염 방지사업, 하천 유역권별 통합물관리체제, 광역도시계획, 광역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 정비사업 등
 - 협력·제휴하지 않으면 인접자치단체간 정책갈등이나 입지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 상호간 저해요인으로 작용
- 협력·제휴했을 때 상호간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 상호간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타 지역에 대한 경쟁력 확보, 규모의 경제에 의한 행정비용 감소효과 기대
 - (예)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정책의 공동시행이나 개별시설의 복합화사업, 광역권 내의 분산된 관광자원을 공동개발(관광루트, 관광상품, 관광지도, 안내판 통일 등)

3) , 4 . , 220 , 2000, p.7.

4) . , , 2002, p.7.

하는 광역지역활성화 사업, 주력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협력사업, 신산업지대망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중소 고부가가치형 기업의 협력·제휴활동 등

2) 협력사업의 성격

-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도로 및 하천정비, 환경기초시설, 발전시설, 문화복지시설, 운동시설 등
- 공동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한 사업
 - 정보 및 문화의 교류, 시설 상호개방 및 공동이용, 각종 축제개최, 인사교환, 방재협정 체결, 공동유통

3)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

- 지리적 연속공간상의 일정범역
 - 협력·제휴를 추진하는 행정구역이 지리적으로 연속된 경우
 - 물리적 및 소프트측면의 협력·제휴가 대상
 - 광역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제휴
- 인접되어 있지 않으나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지역간 협력·제휴
 -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보유한 지역
 - 정보교류 등 소프트측면 사업중심의 협력·제휴
 -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제휴

4) 협력사업 방식 및 강도

- 협력방식은 단순협력에서부터 공동계획, 분담에 의한 공동업무수행, 시설의 공동설치나 이용, 공동투자, 합병 등 다양한 형태
 - 단순협력과 같은 낮은 수준의 협력은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서로에게 일정부분의 이익이 제시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려움
 - 공동계획, 분담에 의한 공동업무수행, 시설의 공동설치나 이용, 공동투자, 합병

등은 일정 협력기구가 설립되고 또한 일정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가 되므로 법적구속력이 강한 고강도 협력

5) 협력·제휴 추진주체

- 행정기관(관), 민간단체(민), 기업(산), 교육기관(학)이 주체로 참여가능하며, 관-민-산-학 공동주체도 참여가능
 - 관이 주체 : 행정구역 및 자치단체 계층에 따라 5개 유형구분 가능
 - 민이 주체 :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협력 및 제휴
 - 산이 주체 : 기업간 클러스터, 정보교류, 공동생산 등의 협력 및 제휴
 - 학이 주체 : 대학간 학과통폐합, 공동강좌개설, 대학역량강화사업, 학술교류 등 협력 및 제휴

< 1>

구 분		행정구역상 소속			
		같은시·도내		다른 시·도간	
자치단체 계층	수직적 협력	I 유형	• 시·도를 같이하는 광역·기초 단체간협력 예) 강원도와태백, 삼척·영월, 정선의 카지노사업 공동참여	II 유형	• 시·도를 달리하는 광역·기초단체간 협력 예)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의 김해교 재가설 공사 공동참여
	수평적 협력	III 유형	• 시·도를 같이하는 기초자치 단체간 협력 예) 파주시와 김포시의 소각장과 매립장 공동시설	IV 유형	• 시·도를 달리하는 광역자치단체간 협력 예) 부산시와 경남의 광역상수도 건설
				V 유형	•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예)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고양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협약

: . . , , p.30.

6) 법적·제도적 측면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 규정

< 2>

구 분	광역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협약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도시계획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54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도시계획법 제20조
구성동기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합의	회원자치단체간 합의	광역서비스 및 시설의 자치 단체간 공동대응
성 격	협의기구 법인격 없음	특별지방자치단체법인격 보유	계약체결(공법상 계약)
사무위임범위	협의를 의함	일부사무복합위임가능	관련사무의 종합적 위임
기 구	회장위원	조합장조합회의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사업주체 선정
재 정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부 담금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부담금	협약에 의한 부담금(조례, 규칙제정)
재원조달	부담금	부담금·사용료·수수료	부담금·사용료·수수료

: “ ”, 「 33(3), p359 .

3. 협력가능분야

○ 박양호(2000)⁵⁾

- 지역공동의 산업진흥, 지역공동의 환경·자원관리, 지역협력의 교통망·정보망 구축, 지역공동의 관광·문화기반 조성 등

○ 이종화(2000)⁶⁾

- 환경보전 관련사업, 의료·복지·건강분야, 지역의 산업활성화,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 김용웅(2000)⁷⁾

- 광역권 개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지역의 광역공급 처리시설 및 서비스 공급, 광역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과 자원의 공동이용과 보전, 지역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간 갈등해소, 광역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

○ 한표환 외(2002)⁸⁾

- 혐오시설 설치·운영, 도로·교통시설 설치, 지역경제 개발, 교육 및 연구·개발,

5) , 4 . , 220 , 2000, pp.10 ~ 13.

6) , . , 220 , 2000, pp.23 ~ 25.

7) , . , 220 , 2000, pp.31 ~ 32.

8) 한표환 외,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02-06(제350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p.205.

친선교류, 물관리 및 환경보전, 행사개최, 일반행정 및 재정

○ '충청권행정협의회', '서해안권행정협의회'와 '백제·금강권행정협의회'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
- 시·도, 시·군간 연결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 교통망 확충
-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상·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이용,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
- 농림수산물의 유통·판매
- 금강유역개발 및 이용, 오염방지
- 광역행정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 등9)

< 3> 가

협력사업유형	대상사업	비고
협오시설 설치·운영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 하수처리, 자원회수(재활용품 선별), 발전소(원자력, 화력)	광역권 설치 포함
도로·교통시설 설치	교량, 도로(광역도로, 관통도로)신설 및 확포장, 고속화도로, 도시철도 연장	
공공시설 설치·운영	복지회관, 박물관, 기념탑, 홍보관, 도서관, 병원(종합, 특수), 소방학교, 교도소, 레크리에이션센터, 운동장, 공연장,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개발	관광, 판매유통, 산업개발, 에너지절약, 기술혁신, 해외시장개척, 외자유치, 경마장, 광역촬영장, 벤처조합, 문화유적관리, 관광개발, 경지정리, 카지노 사업, 화물기지	관광홍보 포함
교육 및 연구·개발	공동용역, 광역개발(도시)계획 수립, 시험·연구원 공동운영, 교육시설공동운영, 환경영향조사, 첨단기술산업 네트워크	공무원제외
친선교류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교류협력	
물관리 및 환경보전	오염방지, 방역, 상수원비용분담, 광역상수도, 온천보전, 정수장, 오염측정망설치, 수질개선, 어업자원관리, 적조대응	
행사개회	이벤트, 지역축제, 체육행사, Expo	
일반행정 및 재정	구역, 조직, 인사(교류, 전문가 고용), 위탁교육, 관리, 경찰, 앰블런스, 화재공동감시·경보, 위험물질 긴급처리반, 공동구매(비품·장비), 헬기공동임차, 버스시계 요금조정, 버스노선조정, 통합교통카드	

: , p.205.

9) 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서해안권행정협의회, 서해안권행정협의회 규약; 백제·금강권행정협의회, 백제·금강권행정협의회 규약

Ⅱ. 충남·전북간 협력·제휴실태 분석 및 문제점(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를 중심으로)

1.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 현황분석

1) 구성목적

- 충남·전북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화합분위기 조성

2) 기능

- 충남·전북 각 자치단체간 협력·제휴활동
- 충남·전북 도정 각 분야별 정책공조 강화
- 충남·전북 각 지역 이해 관계사업 협의
- 지역주민 상호간 친선도모 및 이해증진

3) 구성현황

- 충남과 전북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2002년 10월 구성

< 4> .

구분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수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4개시·군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5개시·군

4) 협의안건 현황

- 충남·전북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 지역간 교류협력회의는 2004년 현재, 제4회까지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 협의된 안건은 제1회 21건, 제3회 4건, 제4회 6건 등 총31건의 안건을 협의

- 협의안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 및 재정, 도로·교통시설 설치, 지역경제·개발, 물관리 및 환경보전의 순이며, 혐오시설 설치·운영, 공공시설 설치·운영,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은 실적이 없음

< 5>

·	· · 77 · - · - · - · - 4 · -	7
·	· 가 · Package · ·	5
	· ·	2
	· · · · ·	5
	· ·	2
	· · · · · · · · · 가 · 2006 · 2004 가	11

5) 협의안전별 주요협력내용

(1) 중앙정부 건의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호남고속철도 노선분기점 관련 공동대응(충남·전북)	·최적의 직결노선 건설을 전제한 천안분기 신설을 위해 전북과 충남이 협력하여 공동대응 방안 마련 - 양도간 : 건교부 및 각계에 강력한 건의 등 - 양도도민·단체간 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개최 등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건설(전북)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산업단지 조성 등에 맞추어 조기착수되도록 충남도와 협력, 중앙부처 공동건의 - 200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추진 건의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활성화(충남)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금강하구둑 쓰레기 처리공동대처(군산, 서천)	·수면관리기관(농어촌기반공사)에서 수거, 자치단체에서 지원 ·쓰레기 처리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생활쓰레기가 90% 이상으로 대청소 실시 필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공동대응 (충남, 익산, 부여)	·국비예산 확보 공동대응 - 중앙부처를 상대로 2005년 사업완료에 필요한 금액 지원요구 - 국회를 상대로 자치단체 요구액 반영 노력 ·민간자본 유치 여건 개선 마련 - 2005년까지 기반시설 및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완료 ·백제문화 위상제고 노력 - 백제문화고증연구, 세미나, 학술회의 등 공동·교차계획 - 백제문화연구 전문가, 대학의 공동협력체 구성
금강수계 규제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확대 (진안, 무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규제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비율 상향조정을 공동건의 - 운영비 지원기준 : 현재 70%에서 100%로 조정 ·금강수계법 시행으로 자치단체 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관리인력(행정·환경·토목직)지원을 중앙부처에 공동요청
충남·전북간 국도 확·포장사업 공동대응(충남)	·연계 국도의 조기 확·포장 추진 노력 - 양 도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 상호정보공유 등 원활한 협력체제 유지
무주(내도 앞섬) ~ 금산(방우리)간 도로 확·포장(무주, 금산)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에 양 자치단체가 금강수계 치수사업비를 우선 지원토록 건의 ·주생활권이 무주인 금산군 방우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양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공조 협조

(2) 도 차원의 협력·제휴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Package관광상품 및 관광벨트 추진 (논산, 익산, 금산, 부여, 진안, 무주)	- 패키지 관광상품 공동개발·연계 - 금산 인삼시장, 무주 덕유산·리조트, 진안 마이산·용담댐 등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상호 협력개발 -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추진 - 논산 계백·견훤묘역, 부여 부소산왕릉, 익산 미륵사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
금강 건강마라톤 대회 (군산, 익산, 서천)	- 공인기관에 마라톤대회 개최 가능여부 진단의뢰 - 거리별(5km, 10km, 하프마라톤, 풀코스마라톤)최적코스 선정 - 대한체육회, 육상연맹, 언론사, 민간단체 및 동호회 등 마라톤 관련기관·단체의 폭넓은 참여 유도 -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후 예산반영 등 행사개최 공동준비
문화예술교류공연 (충남 부여)	- 양 도 예술단 및 민간단체간 교류공연 추진방안 공동협의 - 상호관계기관·단체간 협의체를 구성, 세부사항 협의추진 (공연종류, 횟수, 장소, 방법, 내용, 비용분담 등) - 음악, 무용, 연극, 회화,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민·관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공동노력 강화 - 정기적인 교차공연 외에 각종 대화·행사시 초청공연, 협연 등 실시 - 백제문화 향기를 널리 전파시킬 수 있는 행사 및 프로그램개최 및 연구 등 공동실시
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 (충청남도)	- 대둔산 개발에 필요한 국비지원 요청시 공동대응 - 타 지역 등산로, 공원시설 등도 안내표지판·팸플렛에 기재 - 대둔산 등산객들에게 전지역 탐방을 위한 편의제공 - 안내표지판 및 안내팸플렛 등 제작시 공동제작·활용 - 각 지역별 하산로의 연계교통망 구축 - 지역간 셔틀버스 운행 등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악성 가축전염병 공동대처 (군산)	• 긴급 가축전염병 발생시 인접 시·군간 주요도로 합동방역대 설치 등 공동방역체계 구성 • 방역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사전정보교환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발생시 공동대처방안 모색
민간차원의 협력·제휴증진 (충남, 전북)	• 양도간 분야별 민간기관·단체·협회의 협력·제휴강화 - 경제분야 : 상공회의소,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농어민단체 등 - 사회분야 : YMCA, JC, 로타리클럽,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본부 등 - 문화분야 : 예총, 생활체육협의회, 시민문화발전모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등 - 환경분야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그린훼밀리, 생명의 숲가꾸기운동본부 등 - 학술분야 : 국공립 및 사립대학, 연구소 등 ⇒ 민간차원에서 교류협력이 증진되도록 지원방안 모색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협력 유도

(3) 시·군 차원의 협력·제휴

()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활성화 (군산, 서천)	• 금강연안의 환경보존 대책, 철새보호방안 등 양 시군의 공동문제를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공동해결방안 모색 • 각종 행사교류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기하고 상호공동발전을 도모
도계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운행 확대(완주, 진안, 논산, 금산, 서천)	• 운송조합 협약에 의거 운행중인 버스노선이 상호 도계지역을 넘어 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협조(해당시군간) • 관련업체 및 시군간 협의 난항시 도간 조정협의 추진
배티재 주변공동개발 (완주, 금산)	• 도계지역 상징물(안내판, 화합기념비 등) 공동제작 설치 • 배티재 전망대 설치 • 휴게시설, 공원(화단) 조성 • 충남, 전북 특산품 판매장 설치운영
주천 무릉~남이 대양 도로개설 (진안군)	• 공사발주의 경우 경계까지 양 도에서 책임추진 • 공사추진일정, 설계, 타당성 조사 등에 실무협의추진 (진안군, 금산군)

(4) 지속검토·추진사항

()	
용담댐 물상수원 확보 및 물관리 공동대처(금산군)	• 용담댐 물 상수원관리 양도간 지속적인 협의·조정실시 • 금산군 상수도 취수원 녹지방지대책 협조요청 • 홍수기 용담댐 물관리 : 종합방재정보시스템 공동구축 협의
공동조업수역 조정 및 어업질서 협력 (군산, 서천)	• 단기적으로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 무분별한 어구설치 예방을 위한 어구설치 제한기준 마련 - 수산자원 고갈방지를 위해 관할해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하 등 수산종묘의 지속적인 방류 등 공동추진을 통해 ⇒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한 어업질서를 확립, 고동이행 • 장기적으로는 양도 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 - 양도 해상의 일정구간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 해상도계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검토·협의

6) 협의안건 주요추진 내용

(1) 중앙정부 건의

()	
호남고속철도 노선분기점 관련 공동대응(충남·전북)	• 충남 및 전북이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조기확정 건의 - 건설교통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분기역 위치는 신행정수도이전과 연계검토(대통령업무보고시)
국도 77호선 군장대교 건설(전북)	• 국도확충 5개년계획에 군장대교 포함 건의(건교부) • 공동합의문 채택 - 기존노선(새만금~개야도~서천비인)을 장항단지로 변경 •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방문 건의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활성화(충남)	• 2004년 호안·진입도로사업비 133억원 반영(기획예산처)
금강하구둑 쓰레기 처리공동대처(군산, 서천)	•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처리비지원 건의(금강수계관리위원회) • 관련기관 수거대책회의(서천·군산·군산해양청·농업기반공사) • 금강주변일제 대청소, 금강쓰레기 수거사업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공동대응 (충남, 익산, 부여)	• 양도 공동합의문 채택 •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개최 • 백제문화권개발계획변경(안) 양도 공동작성
금강수계 규제지역 수계 관리기금 지원확대(진안, 무주)	•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 지원대상지역 조정건의(금강수계관리위원회) •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보강지시(행자부) - 전북 32명, 충남 28명
충남·전북간 국도 확·포장사업 공동대응(충남)	• 국가 간선도로망 조기시행 건의 • 사업우선순위 및 투자재원대책 미결정 상태(건설교통부)
무주(내도앞섬)~금산(방우리) 간 도로 확·포장(무주, 금산)	• 금강수계치수사업으로 금강전도제 개수공사 착공

(2) 도 차원의 협력·제휴

협력과제(발의기관)	주요 협력 내용
Package관광상품 및 관광벨트 추진 (논산, 익산, 금산, 부여, 진안, 무주)	• ‘금강권 관광협의회’ 구성 합의 • ‘백제문화유적권역협의회’ 개최, 추진사업 등 협의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 군산) • ‘중부권금강협의회’ 구성 개최, 공동홍보물 제작 등 협의 (금산, 완주, 진안, 무주) • 백제문화권 문화관광 투어 실시
금강 건강마라톤 대회(군산, 익산, 서천)	• 기존의 ‘서천~군산간 금강 달리기 대회’ 활성화 - 2003.10.3 제2회 대회에서 3천명 참가
문화예술교류공연 (충남 부여)	• 군산 벚꽃 예술제, 진안 마이산벚꽃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익산 보석문화축제에 충남국악단 참가 • 한산 모시문화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젓갈축제에 전북 도립국악단 참가
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충청남도)	•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25개소) • 홍보물 공동제작·활용 • 지역간 순환버스운행 합의(노산 양촌-대둔산)
금강하구 철새서식환경 조성(충남, 군산, 서천)	• 철새서식환경 조성 - 철새 먹이농장 조성, 흑한기 먹이주기 • 밀렵행위 단속반 구성 및 합동단속 : 2개반 16명 • 금강생태체험현장 운영 - 마서지역에 금강 철새탐조대·금강환경교육센터 운영 - 군산지역에 철새조망대 설치완료(11층 54m)
산불예방 및 진화협조체제 확립(논산)	• 산불연접지 산불요인 제거 : 논·밭두렁 소각 • 산불예방 홍보공동 추진 : 서한문, 앰프방송, 차량계도 • 초동진화를 위한 공조체제 강화 및 상호 감시활동체제 유지 - 진화대 200명, 진화차 12대
악성 가축전염병 공동대처(군산)	• 인접 시·군간 현지 합동방역대책협의회 개최 •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설치 운영
민간차원의 협력·제휴증진 (충남, 전북)	• 문화예술 교류공연협의(양도국악단 교류공연) •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교류방안 협의 • 새마을도지회 교류방안 협의

(3) 시·군 차원의 협력·제휴

()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활성화 (군산, 서천)	• 2003년 제1회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 개최 - 협의안건 : 악성가축전염병 공동대처 방안 등 7건 - 연구과제 : 금강하구언 쓰레기 공동처리 - 중앙건의 : 금강광역권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협력체제 구축 등 3건
도계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운행 확대(완주, 진안, 논산, 금산, 서천)	• 2개 노선운행합의, 운행계획서 및 동의서 교환(논산·완주) • 3개 노선 연장합의(진안, 금산)
배티제주변공동개발 (완주, 금산)	• 배티제 전망대 및 휴게실, 화단조성계획 수립 • 도계안내표지판 설치관련 현장방문 및 추진계획 협의
주천 무릉~남이 대양 도로개설(진안군)	• 금간구간 실시계획 완료 • 전북구간 행정자치부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 군도정비사업 장기 계획 수립

(4) 지속검토·추진사항

()	
()	·
(,)	· · ·

7) 협의안건 향후 추진계획

I. 공동방문단 구성 재건의	
1. 충남·전북간 국도 확·포장사업 공동대응	•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사업우선순위 조정 위해 공조
2. 국도 77호 「군·장대교」 건설	• 건교부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노력

II. 지속점점 추진	
1.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 호안도로 및 진입도로 1·2호선 공사착수(2004.10) •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고지원방안 강구공동노력
2.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공동 대응	•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 협의사항이 수용되도록 공동노력 - 국회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활동 적극진개
3. 「공동조업구역」 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	• 해양수산부 해상경계설정 계획에 따라 지속협의 추진 • 도계 인근해역에서의 불법어업 단속 등 어업지도 협력
4.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조기확정	• 신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양도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고속철 분기역을 천안으로 조속결정 촉구
5. 「금강하구둑」 쓰레기 공동대처	• 수면·해역관리기관간 합리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처리 - 수면(농업기반공사), 해역(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반처리(군산시, 서천군) • 양 도 공동으로 쓰레기처리비 국고지원 지속건의
6. 「금강수계규제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비용 • 지원대상지역이 확대 조정되도록 공동협력
7. 꽃게 급어기 규정 개정	• 관계법령 개정시 합리적인 급어기 설정 지속건의
8. 남이 건천리~운주 산북리간 도로 확 포장	• 양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2005년도 본 예산에 소요사업비 공동반영 추진
9. 군산~서천간 국도 4호선 도로연결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강구
III. 정상추진	
1. 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	• 시설물 정비시 안내팸플렛 등 홍보물 공동제작활용 • 대둔산 도립공원 셔틀버스 운행확대 추진 • 대둔산 테마관광코스 공동개발
2. 배티재 주변 공동개발	• 도계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2004.6-12) • 도계지역 상징물(화합기념비, 전적비소개 등)지속협의 • 배티재 전망대 설치 및 주변지역 성역화사업 공동추진
3. 야생조수 보호 공동대처	•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군 유기적 감시체계 확대 • 체계적 밀렵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및 정기회의 개최(월1회) • 엽구수거 및 먹이주기행상 공동개최(월1회)
IV. 신규건의 및 협력·제휴사항	
1.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공조체제 구축	•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당초계획대로 이행촉구 및 건의 • 양 지역간 공조를 통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협조·지원당부
2. 군산철새축제 「충남관광홍보관」 설치·운영	• 철새축제 기간중 주행사장에 충청남도 또는 서천군의 관광홍보관 설치·협조 • 군산시 철새축제 관련 홍보물에 서천지역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연계운영하는 홍보방안 강구
3. 부여지역 「문화예술축제」 참가협조	• 양대축제 참석 및 한국민속예술제에 전북도립국악단 공연협조 • 양 도민의 관심과 유관기관·단체 등 참여홍보활동 전개
4.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공동노력	• 인삼재배는 금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도 많이 재배하므로 주민소득 증대차원에서 지역을 초월한 인삼엑스포 홍보활동 전개
5. 탑정호 유입쓰레기 저감방안 공동추진	• 하천변 쓰레기 적치 및 투기행위 계도·단속 실시 • 행락철에 민·관 합동으로 논산천 및 장선천 대청결운동 추진
6. 「2004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 참가 협조	• 전북·충남지역 소재 자동차관련 기업의 엑스포 참가노력 • 양 도민의 관심과 유관기관·단체 등 참여홍보활동 전개

2. 협력·제휴의 문제점

1) 개별사업 위주의 불명확한 공동발전 목표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사업은 지역경제, 교통, 관광 등 주로 양도의 공동관심사 및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어서 공동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양도가 협력·제휴했을 경우 발전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과 교류협력하지 않으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사업의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목표는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대부분이 개별사업위주로 제시되어 있어서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발전목표가 불명확한 점은 개별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이후의 새로운 협력·제휴사업도 개별사업의 형태로 선정될 수밖에 없어 협력·제휴사업 자체가 파편화 되고 분절화 될 가능성이 내재함

2) 단순한 협력·제휴형태의 사업내용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제휴의 방식 및 강도는 단순협력의 형태에서부터, 공공투자 및 지역사회통합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협력·제휴의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 형태임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사업의 내용은 국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지원하는 형태, 도 사업의 경우 지도단속, 시설물공동설치, 재원공동부담 등의 형태, 시·군 사업의 경우 행정협의회 구성, 시설물공동설치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 따라서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는 단순협력이거나 공동분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공동설치와 이용, 공동투자 단계 등 보다 고강도의 협력·제휴사업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제휴 추진

- 지역간 협력·제휴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관 주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차원의 협력·제휴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행정의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친선교류차원에 한정되고 있음

4)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중심의 협력·제휴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서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임.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전북의 협력·제휴사업도 양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분담이 필요한 사업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중심으로 추진
- 이와 같이 재정이 수반되는 협력·제휴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광역 및 자치단체의 투자재원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재정투자 결정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5) 협력·제휴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미흡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가 양도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협력·제휴사업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 그러나 충남의 경우 행정협의회는 기획관실, 충남·전북협력회의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에도 협력·제휴사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거나 종합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평가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IV. 충남·전북간 협력·제휴의 효율적 추진방안

1. 문제점 극복을 위한 협력·제휴방안

1) 협력·제휴의 목표 및 전략 설정

(1) 목표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신국토 및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상생발전”

(2) 전략

-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간 핵심역량 육성 및 네트워크 형성
 - 신행정수도의 연기·공주입지에 따라 신행정수도가 신국토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전라북도가 지역적인 잠재력에 기초하여 핵심역량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 지역간 교류 및 협력네트워크를 형성
- 지역자원의 공동개발 및 이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충청남도과 전라북도가 보유한 자연경관, 환경, 역사문화, 인적자산, 산업경제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및 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
- 양 지역간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 환경, 사회간접자본, 물 문제, 연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양 지역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대응체계 구축전략 필요

2) 협력·제휴사업의 단계적 추진방안

- 지역간 협력·제휴의 접근과정은 협력·제휴의 형태(목표, 주체, 방식, 내용)를 중심으로 상호간 기반조성단계 → 협력·제휴의 신뢰단계 → 협력·제휴의 적응단계 → 공생적 협력·제휴단계 등의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함.

- 따라서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도 피부에 와 닿는, 손을 뻗어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부터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협력·제휴습관을 확립해야 하며, 협력·제휴에 대한 100가지 이론정립보다 1개의 가시적 실천모델을 실행에 옮겨보는 작업이 중요함(이종화, 2000).

○ 협력·제휴의 접근단계 및 내용

구 분	목 표	주 체	방 식	내 용
1단계 (상호기반조성)	상호간 협력여건 및 내적기반 조성	공공부문 민간부문	지방정부주도형 지역주민주도형 지역기업주도형 지역단체주도형	• 내적 측면에서 민·관 공감대 형성 • 법적·제도적 여건탐색 • 협력제휴대상자 탐색 (접촉/협의를) • 비공식적 정보교환
2단계 (협력·제휴신뢰)	협력·제휴사업의 발굴 및 탐색			• 협력·제휴협의체 구성 • 협력·제휴사업의 탐색 • 협력·제휴우선순위 사업 선정 • 협력·제휴사업의 내용 선정
3단계 (협력·제휴적응)	협력·제휴의 사업 적용			• 협력·제휴사업의 부분적 실행 • 협력·제휴사업의 확대
4단계 (공생적협력·제휴)	협력·제휴의 지속 화			• 협력·제휴주체간 협력사업의 성과평가 • 협력·제휴사업의 지속적 토착화 • 신규 협력·제휴사업의 모색

18 , 9 , 3 , 2001, p.16.

3) 지역간 협력·제휴사업에 대한 인식공유

- 지역간 협력·제휴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지역발전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협력·제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지역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동 문제의식이 형성되어야 함(이종화;27)
- 지역간 협력·제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제휴하는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끼리 교류하고 지역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깊게 하고 협력이나 제휴를 추진하려는 의식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신창호; 36).

4) 민간에 의한 협력·제휴확대 방안 모색

- 주민조직, 지역NGO 등의 협력·제휴를 통해 상대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대하고,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해결 문제를 발견하고 여론화시켜 지방정부에 환원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또한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환원된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제도적 협력·제휴방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역축제에 대한 참여 및 공동개최, 지역특산물 공동판매, 청소년·여성단체 교류, 지역NGO간 자매결연, 의회교류, 학술교류, 유관기관 교류사업 등

5) 협력·제휴를 위한 기금조성

- 현행 ‘남북협력기금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제휴를 위한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휴를 위한 기금의 용도는 시설의 공동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사업재원이 아니라, 주민간 협력·교류, 문화·학술·스포츠분야 등 협력·교류 기반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6) 협력·제휴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 충남의 경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협의체 관리를 일원화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제휴·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협력·제휴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제휴사업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7) 충남·전북간 협력·제휴현장 제정

- 자치단체 상호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며, 수평적 관계에 입각하여 다양한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자치단체 협력·제휴현장을 제정하여 자치단체간 협력의 기본틀을 형성함
- 현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공동결정, 공동사업, 행정협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물적교류, 분쟁해소절차의 기본원칙과 의사진행 및 결정의 기본원칙 등을 중요내용으로 규정하여 자치단체간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⁰⁾

8) 충남·전북의 경쟁우위산업의 협력·제휴방안

- 충남과 전북도의 특성에 부합되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진 핵심산업군을 선택하여 특화하고 여타산업은 분업전략을 통해 타지역에 과감히 양보함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간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양 지역에 유리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제1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나타난 충남과 전북의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전략산업	주요산업
충 남	전자·정보기기산업	• 디스플레이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 디스플레이 교육센터운영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 자동차 부품소재 R&D 집적화센터 설립 • 자동차산업 혁신체계(RIS)구축
	첨단문화산업	• 디지털컨텐츠진흥원 설립 • 영상콘텐츠 Data Bank 센터
	농축산 바이오 산업	• 바이오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 • 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전 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 첨단기계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고도화 사업
	생물산업	• 바이오파크 구축사업 •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시스템 구축사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 나노 방사선 영상기술 개발사업 •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 맞춤형 체험관광상품 활성화사업 •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육성사업

: 가 , 1 가 5 , 2004.

10)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활성화 방안 연구, 1999, pp.237~239.

- 따라서, 충남과 전북은 전략산업을 특화육성하고 각자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과감히 다른 지역에 양보하는 산업간 협력·제휴를 통해 광역권 자급자족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역내분업과 역외교역을 통해 공동의 지역이득을 확대함

9) 새로운 형태의 특별자치단체 도입필요성 검토

-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간 협력·제휴는 “행정협의회”,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지역협의체는 자치단체장 위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의 참여 제한, 협의사항에 대한 구속력 결여, 협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 결여, 협의체 사무국 기능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프랑스식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나 일본의 광역연합제도(광역행정제도) 등 특별자치단체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의 수가 많고, 규모가 지나치게작아 행정·재정·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형과 연합형으로 구분
 - 일본은 인구감소, 고령화사회, 시정촌의 행정 및 재정능력 강화를 위해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시정촌합병 등으로 구분

10) 계획협약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 프랑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획협약제도는 분권화 계획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시되면서 국토 및 지역계획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 계획협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에 대하여 재정투자를 약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하여 자치단체장들이나 의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계획협약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체결되지만,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기업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충남·전북간 협력·제휴사업 가능분야 제안

1) 단순협력·제휴가 필요한 분야



- 양 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교류, 체험학습교류, 체육 및 스포츠교류, 문화·예술 교류, 민간단체 교류
- 양 도 경계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마을 단위의 자매결연 추진
- 도계 및 군계, 면계지역의 휴게소·녹지 및 화단·상징물설치 사업
- 양 도 공무원 교차파견근무, 도의회의원 경험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
- 경계지역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 양 도 지방연구원간의 학술교류 협정체결을 통한 공동연구
- 학생 및 청소년의 home stay

2) 공동계획 및 자원공동이용 필요한 분야



- 충남·전북의 협력·제휴의 실천성확보를 위한 공동계획 수립
 - 사회간접자본, 관광, 문화, 산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제휴방안 모색
- 금강주변 충남·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계획 수립
 - 금강에 인접한 자치단체들간의 협력·제휴방안을 주요내용

- 금강의 물대책과 환경관리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통해 하나의 유역생태권으로 복원·보전
 - 상호 협력적 경제권 및 사회문화권, 수변관광권 형성
 - 금강유역발전협의체 구성 및 금강기금 창설 등
- 충남-전북간 공동관광상품 및 관광루트 개발방안
 - 관광분야에 한정하여 관광상품, 관광루트, 관광마케팅 등의 협력·제휴방안 모색
- 강경-군산간 금강호의 관광상품 활용을 위한 협력·제휴방안
 - 탁류의 무대인 강경과 군산을 연결하는 금강호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제휴방안 모색
- 금산군-무주군의 '신활력지역'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 모색
- 금산-무주군의 관광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제휴방안
 - 금신인삼축제와 무주반딧불이 축제의 공동개최방안 모색
 - 금산-무주관광의 공동마케팅 추진
 - 금산-무주연계 버스투어패키지 개발
 - 금산 및 무주특산물 매장의 공동설치 및 판매
 - 관광홈페이지 공동개설 및 운영 등
- 백제문화권 협력적 정비와 보존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통한 백제문화유적의 복원·보존
 -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및 문화관광산업의 발전방안
 - 백제문화권 보존지구 및 개발지구 지정
 - 백제문화권 관광루트 개발 등

3) 광역시설 공동 설치·운영이 필요한 분야

-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위한 기획조정위원회의 설치
 - 협력·제휴사업 구상 및 기획단계에서 실무차원의 공동기획·조정

- 지방자치단체, 지역NGO, 지역언론, 지방연구원, 상공회의소 등 공동참여
- 광역 및 지역간 연결도로, 교량의 확장 및 신설 등 SOC시설 확충
- 충남-전북의 관광개발을 위해 공동투자하여 광역지방공사 설립방안 검토
- 수해방지시설의 공동설치(하천, 공동조립 등)
- 산업 및 주거단지의 공동개발 등

3. 협력·제휴사업의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방안

1) 기본방향

- 충청남도과 전라북도간의 협력·제휴는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가 주도하는 형태로 지역간 협력과 공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의의 성격상 느슨한 형태의 협력·제휴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남-전북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 협의회 산하에 부문별 실무추진위원회, 사무국기능 강화,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협력·제휴의 집행력을 확보함
- 장기적으로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충남·전북행정협의회’를 포괄하는 ‘신행정수도권발전 전담기구’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함

2) ‘신행정수도권발전전담기구(가칭)’로 전환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신행정수도주변지역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신행정수도권발전전담기구’로 전환
- 현재의 교류협력회의, 행정협의회 등은 구속력이 없거나 협력강도가 약한 차원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부문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사업추진상 갈등과 분쟁조정, 개발 사업간의 집행상 연계와 협력, 사업우선순위 및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 지역예산제도 도입 등의 기능을 부여한 제도적 수단인 ‘신행정수도권발전전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 참 고 문 헌 >

- 권희재·김장기, "지방정부간 교류협력관계의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강원도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16권 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 권희재·사득환·김장기,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조건과 가능성: 중앙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10권,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
- 김선기, "지역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활성화 방안", 월간 국토, 통권 265호, 국토연구원, 2003.11.
- 김영종,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정부학회, 2001.
- 김용웅, "광역권개발에서의 지역간 협력·제휴방안",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0.
-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2000.7
- 박양호,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지역간 협력·제휴의 유도",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0.
- 배준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적 지역개발 방안", 월간국토, 제247권, 국토연구원, 2002.
- 배준구, "지방정부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 전략 :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방안 : 부산·울산지역을 중심으로", 2001년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1.
- 사재명, "지방정부간 협력의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10권,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
- 신창호, "일본의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한 지역발전사례",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0.
- 신희권, "자치단체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0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2000.
- 신희권,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2002.
- 양현모,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2002.
- 양현모·이준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4호(통권 44호), 2003.

-
- 이양재, "지역간 협력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0.
- 이종화,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한 지역발전모델",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00.
- 이태종·김영중, 지역협의체의 효율적 활용방향 : 경산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2호, 한국정부학회, 1998.
- 임명배, "전략적 제휴 시대에 부응한 지방정부의 코퍼티션(Cooperation) 전략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충남대학교, 2000.12.
- 전라북도, 제3차전라북도종합계획, 2000.
- 전라북도, 행정수도이전과 신국토관리전략 수립에 따른 전북의 대응전략, 2003.
- 조상필, 영호남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지역발전 방안, 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1.
- 충청남도, 제3차충청남도종합계획, 2000.
- 충청남도·전라북도,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1·2·3·4회), 2002~2004.
- 한표환·김선기·김필두,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제350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 홍석균·손호중, "중부내륙권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지역개발연구, 제10권,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